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6.13(월) ~ 2022.6.17(금)

제공일시 2022 06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6.13(월) ~ 2022.6.17(금)

제공일시 2022 06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의회, 원전과 가스 '택소노미'서 배제 결의

- EU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합동회의를 열고, 원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62표, 기권 4표로 채택했음

(조선일보, 2022.6.16) 박상현, 김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6/16/SKOTRECFP4G4U48E3949U/>

(임팩트은, 2022.6.15) 박지영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idxno=4248>

-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첫 주에 열리는 EU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데, 유럽의회 의원 705명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내야 함

- 반대가 더 많으면 원전과 천연가스가 들어간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처음 발표

2.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국제 노동기본권으로 채택

- 국제노동기구(ILO)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협약에 포함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의 원칙을 ILO의 노동기본원칙과 노동권리에 추가했음

(매일노동뉴스, 2022.6.22)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idxno=20252>

- ILO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 필수규범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추가한 조치임

- 총회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협약 문제를 두고, 국제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임

- 노동자그룹은 기업 수준의 보건서비스 체계 설립을 규정한 직업보건서비스 협약(161호)과 155호의 기본 협약을 주장했으며, 사용자그룹은 155호와 187호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됨

3. 美 '중국 겨냥' 초강력 투자규제법 추진

- 미국 의회가 자국 기술과 안보를 보호하고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심사를 진행하는 '아웃바운드 투자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해럴드경제, 2022.6.14) 유혜정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id=00200400403>

(파이낸셜뉴스, 2022.6.14) 송경재 기자
<https://www.fnnews.com/news/2022061417200299>

- 미 기업과 투자자는 이곳에서의 투자 내역을 공개하고 심사를 받게 됨. '관심 국가'로 지정된 곳에서의 신규 투자, 신규 공장 건설, 지식·지적 재산의 이전을 포함하는 합작 투자, 벤처투자, 사모펀드 거래 모두 규제 대상임

- 더 나아가, 미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투자 내역을 검토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 간 패널인 '국가핵심역량위원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1. 美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이달 21일 발효

-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생산되는 면, 의류 등과 토마토, 폴리실리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Uyger Forced Labor Provention Act, UFLPA)이 발효됨
- 약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강제 노동에 의한 물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했던 기존 관세법과 달리,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으로 규정함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법 시행에 앞서 설명회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충분한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곧 강제 노동 기업의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음

(어패럴뉴스, 2022.6.13) 정병창 기자
[http://www.apparelnews.co.kr/news/view?bn=53848](http://www.apparelnews.co.kr/news/view?news_view?bn=53848)

2.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성 커진다… 주요 기업 투자 증가

- 유럽과 미국의 일부 태양광 기업은 대량의 태양광 폐패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글로벌 태양광 폐패널 시장이 커지고 있음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는 태양광 패널에서 회수한 소재의 가치가 2030년과 2050년까지 각각 4억5000만 달러(5829억원)와 150억 달러(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이에, 세계 최대 태양광 전력 공급사 중 하나인 이베르드롤라가 폐기물 관리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기업 퍼스트솔라의 공장은 이미 태양광 패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췄음
-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는데, 시행 반년여를 앞둔 현재, 업계와 환경부 간 깊어진 갈등으로 인해 파열음이 높은 상태임

(인더스트리뉴스, 2022.6.16) 정한교 기자
http://www.industrynews.co.kr/news/view?news_view?bn=46252

3. 올해도 멀어져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
- MSCI가 오는 24일 검토 대상국(위치리스트) 발표에 앞서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를 9일(현지시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전면 허용 등에서 여전히 개선된 게 없다는 지적을 받음
- MSCI는 먼저,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충분한 영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 외국인 투자자들이 24시간 자유롭게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환시장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눔

(매일경제, 2022.6.10) 문지웅 기자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6/51044>

1. OECD 각료들, 러시아 강력 규탄... 공급망 약화 대응 협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며 세계 경제 영향에 대응한 공조를 협의함
- 회원국들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식량-에너지 불안, 공급망 약화 등 리스크 완화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장함
-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측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을 국제 사회에 촉구함

(이데일리, 2022.6.11) 이명철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newsView.asp?newsid=2022061100140141>

2. 친환경의 역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그린플레이션' 우려

- 각국의 친환경 정책 확대로 관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친환경 경제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옴
-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역설적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 회복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임
- 특히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 상승은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각국 정부가 목표로 정한 친환경 전환 목표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뉴스원, 2022.6.12) 문창석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74707344>

3. 선박연료 탄소세 추진에 선사들 비상... IMO 온실가스 부담금 검토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 연료에 대해, 탄소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을 적극 검토하면서 선사들이 긴장하고 있음
- IMO는 최근 열린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8)'에서 배출 규제 방안을 논의. 추가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 도입될 경우 해상 운임은 더 올라서 화주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것으로 관측됨
- IMO는 향후 두 차례의 MEPC(올해 12월, 내년 봄)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에 차등을 두는 탄소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 국내선사들은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차라리 확실적인 규제(탄소세)로 결론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요구하는 것을 알려짐

(매일경제, 2022.6.13) 박동환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13184>

1. 美 에너지부, 청정수소 허브 건설법 지지

-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전역에 지역 청정수소 허브(H2Hubs)를 개발하기 위한, 초당적 기반시설법(BIL)의 80억 달러(10조3600억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의향고지서(NOI)를 발표함
- 미국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은 “수소 허브들은 깨끗한 에너지로 작동되고 미국 근로자들에 의해 건설되는 탄력적인 그리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에너지부는 고용 기회를 우선시하고 수소 공급원, 최종 용도 및 지리적 다양성을 다루는 제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역 청정수소 허브(H2Hubs)를 통해 경제 내 여러 부문에 걸친 수소 생산, 운송, 저장 및 활용의 선진적인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함

(가스신문, 2022.6.15) 양인범 기자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64>

2. EU집행위, 구글 등 빅테크 대상 ‘가짜뉴스’ 규제

- 유럽연합(EU)이 구글 모기업 알파벳,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함
- 이들 기업은 앞으로 딥페이크 콘텐츠, 가짜 계정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여과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전자신문, 2022.6.14) 윤희석 기자
<http://www.etnews.com/2022061401077>

3. 사회책임투자 채권 누적 신규상장액 200조 넘겼다… 세계 11위 규모

-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10일을 기준으로 사회책임투자(SRI) 채권의 누적 신규상장금액은 약 200조2000억원으로, SRI 채권이 최초 상장된 2018년(1조3000억원) 대비 154배 성장했음
- 종류별로는 사회적 채권이 159조원으로 80% 가까이 차지했고, 녹색채권(19조2000억원)과 지속가능채권(21조7000억원)은 각각 10%가량 났음
- SRI 채권이 상장된 전 세계 거래소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상장 잔액 기준 11위이며,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싱가포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 이은 3번째임

(아시아경제, 2022.6.15) 이명환 기자
<http://www.asiae.co.kr/article.html?idxno=2022061501175>

4. 국내 기업 절반, ‘이것’ 활용해 ESG 경영 공시한다

- 국내 주요 기업이 비재무적 경영 요소인 ESG 공시와 관련해,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ESG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음
- 13일 ESG 평가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형태로 ESG 공시를 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속가능회계기준(SASB)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가 마련한 공시 양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박영주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은 “올해는 ISSB가 두 기준을 반영한 초안을 공개했고, 내용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두 기준을 보고서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함

(데일리임팩트, 2022.6.13) 박민석 기자
<http://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5>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6.13(월) ~ 2022.6.17(금)

제공일시 2022 06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CA100+, “넷제로 선언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 고려해야”

- 최대 투자자 그룹 ‘클라이밋 액션 100+(Climate Action 100+)’가 “**넷제로(탄소중립) 기업 벤치마크 평가 결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평가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며 관련된 사회적 약속과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현지시간) 경고
- CA100+는 넷제로(탄소중립) 선언 기업의 성과를 추적하여 투자자에게 기업의 탈탄소 비즈니스 전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벤치마크 평가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음. CA100+는 10가지 지표를 마련해 벤치마크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정의로운 전환’ 지표를 평가에 통합시키기도
- **CA100+가 정의로운 전환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킨 이유는 투자자들의 거센 요구 때문.** 일례로, 캐나다의 넷제로 투자자 연합체인 CEC(Climate Engagement Canada)는 “(탈탄소 전환에 있어)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업과 미래에 영향을 받고 소외되지 않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벤치마크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합시켜 기업의 행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CA100+에 주장한 바 있음
- 투자자의 거센 요구 가운데, CA100+의 정의로운 전환 지표는 ‘파리기후변화협정’과 ILO(국제노동기구)의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 **현재 발표된 CA100+의 정의로운 전환 지표는 베타 버전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표 내용을 확정된 후 2023년부터 평가에 적용할 방침**

(Climate Action 100+, 2022.6.16)
<https://www.climateaction100.org/news/news-for-robust-just-transition-planning>

(12ft, 2022.6.17) Dominic Webb
<http://12ft.org/en/?url=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2022/06/17/climate-action-100-just-transition/>

지표 9.1. 인정(Acknowledgement)

- 인정 기준a) 기업이 정의로운 전환을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
- 인정 기준b) 기업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및/또는 ILO 정당한 전환 지침을 명시적으로 참조

지표 9.2. 약속(Commitment):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기로 약속

- 메트릭a)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탈탄소화를 약속하는 정책을 발표
- 메트릭b) 기업은 탈탄소화로 영향받는 근로자 채용을 유지하고 재교육, 재비치 및/또는 보상을 약속

지표 9.3. 참여(Engagement):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

- 메트릭a) 기업은 근로자, 노조, 지역사회 및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

지표 9.4. 조치(Action):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탈탄소 전략을 구현하고 조치

- 메트릭a) 기업은 탈탄소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저탄소 이니셔티브(예, 재생에너지,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접근, 현장 용도 변경)를 지원
- 메트릭b) 기업은 탈탄소 노력과 새로운 사업으로 영향받는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탈탄소 전환이 이뤄지도록 보장
- 메트릭c) 기업은 기업의 탈탄소 전략으로 악영향을 받는(재정적 부담 등) 취약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이행

- 이 같은 지표 내용을 토대로 CA100+는 집중적으로 벤치마크 평가를 받고 있는 166개 기업을 평가했고, **73% 기업이 정의로운 전환 베타 지표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음. 지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27%로 나타났으며, 이중 75%가 넷제로 이행에 있어 ‘정의로운 전환’의 조치 필요성을 공식화시키는 ‘인정(Acknowledgement)’만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업의 저조한 개입을 규탄하며, CA100+는 “탄소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저탄소 전환 과도기적 위치에서 물리적, 재정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 * ‘정의로운 전환’은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